

노총연구원 신서 6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

남기곤

<제 목 차 례>

1. 서 론	1
2.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4
(1)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4
(2) 경제가 성장하면 불평등은 축소되는가?	8
(3)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4
3.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 상황	18
(1) 우리 나라는 분배 모범국인가?	18
(2) 사람들은 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가?	30
(3) IMF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	37
(4) 불평등의 세대간 재생산 - 교육의 역할	44
4. 결론	50
<참고문헌>	53

<표 차례>

<표 1>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초기의 실증적 연구	20
<표 2>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추계 비교	24
<표 3> 불균형도 지수를 통한 국제비교	29
<표 4> 부의 집중의 국제비교	34
<표 5> 1997년 대비 1998년 계층별 소득 및 지출수준 비교	39
<표 6> 1997-1999년 사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추이	42
<표 7> 계층별 교육 상황에 대한 비교	49

<그림 차례>

<그림 1> 교육비의 계층별 비교	47
--------------------------	----

1. 서론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나라 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1997년 한보나 기아와 같은 몇몇 거대 재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더니, 급기야는 그 여파로 인해 국가 경제 자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 겨우 국가 파산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컸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다행히 직장을 잃지 않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10% 이상의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경기가 뚝뚝 얼어붙었고 많은 가게와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99년 이후 다시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IMF 위기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처럼, 위기로부터 신속하게 탈출하게 된 것 역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대외신인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고, 실업자들은 직장을 얻어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아직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사회 전체의 이익은 도외시한 채 개별 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다시 등장하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여하튼 현재로서는 과거 IMF 이전의 상황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동안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육성됨으로써 경제의 기초가 보다 견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IMF 경제위기는 한 때의 악몽이었거나, 혹은 우리의 몸을 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쓰디쓴 약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경제학의 제일의 철칙은 어느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에는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대외개방의 심화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이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심화되었다. 또한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경제적 불평

등은 경기가 회복된 1999년 이후에도 좀처럼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 빈곤인구가 1,000만명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둘러싸고 정부 및 학계에서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나,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생계비 부족분 만큼을 보충해 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실 등은 그만큼 우리 나라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매우 많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우리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나 불평등한가’라는 초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는 현재 이 부문에 대한 연구성과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제2장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검토한 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불평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불평등이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곤 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등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무엇이 불평등이고 또 무엇이 평등인지, 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러한 불평등은 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본다면, 명쾌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동안 철학이나 사회과학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논의 대상이었으며, 아직까지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들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들 논의들은 불평등의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과 불평등의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전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득이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득하게 된 부는 이를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있고, 이러한 권리(자유)야 말로 다른 어

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고 본다. 따라서 부를 취득하게 된 과정만 정당하다면 이렇게 형성된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오직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된 부와 이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서만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평등주의나 공리주의에서는 현실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일까? 평등주의자들은 인간이 원래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소비하는 재화도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야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자들은 분배를 보다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총만족도(총효용)을 높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부지런하건 게으르건 간에,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똑같아야 하는가? 그런 사회에서 누가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부지런히 일하려 할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이 입장에 속하는 많은 학자들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1) 모든 사람들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2) 모든 사람들이 교육이나 직

업선택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불평등의 문제는 최저생활도 유지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문제와 사회의 편견 등으로 인해 기회가 불공정하게 제약 당하고 있는 계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입장의 핵심적 내용을 매우 단순화시켜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 같은 입장 내부에서도 매우 다양한 의견들의 개진되고 있으며, 상대방 입장에 대한 공격과 반박이 계속되어 왔다. 또 이들 상반된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평등관을 설정하려는 롤즈(J. Rawls) 이론과 같은 시도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 재화를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평등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분배 과정에 절차가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즉 부유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부지런해서 그만큼의 재산을 모은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부정부패나 투기, 불법적인 활동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킨 것인지 하는 재산 형성의 과정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재산의 격차가 몇 배나 나는지 하는 불평등의 결과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출발점이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 및 훈련시설로부터 배제되고, 이로 인해 숙련 수준이 낮아 좋은 직장으로 부터 배제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는 것이라면, 가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결국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평등 정도가 큰 지 아니면 작은 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 혹은 부모 잘 만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물론 현실에 있어 부유층의 재산 중 어느 부분까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동일한 기회 조건하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무리 법률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교육 정책을 평등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정리한 평등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계층에게 정보의 이용을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식들에 대한 재산 상속을 금지시킨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치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불평등 정도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지금 현재의 불평등은 상당 부분 절차의 불공정성과 기회의 불균등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나 기회제공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절차 및 기회의 불균등성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 절차를 고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의 불평등이라는 결과에 대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조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며 또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가 성장하면 불평등은 축소되는가?

이 문제는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예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문제 중의 하나이다. 1955년 쿠즈네츠(S. Kuznets)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소득분배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 성장과 분배간에 역U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소위 쿠즈

네츠의 역U자 가설(inverse U hypothesis)이라고 알려진 이 유명한 명제는, 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분배상태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분배 상태가 개선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초기 단계에서는 몇몇 도시의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그 전의 농경사회에 비해 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다 보면 그 효과가 경제 각 분야에 고루 퍼져 나가기 때문에 불평등도는 축소된다.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은 축소되고 각 산업 부문의 생산성은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노동자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소득에서 이들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이 가설은 그 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명제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이 논리가 잘못 이해됨으로써,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 불평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불필요하다”거나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

하면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 가만히 지켜보
기만 하자”라는 식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준
구(1992)에서 잘 지적되어 있듯이 이 가설은 선진국의 경
우 성장과 분배 사이에 이러한 역U자 관계가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힘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
이다.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
을 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이 가설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분배 상태가 개선
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 외에도, 당시 사
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평등주의적 조류와 이에
기반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선진국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까지
도 유효한 것인가? 선진국의 분배상황은 계속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많은 연구들은 선진국들에서도 1960년대 말을 분기점으로 다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70년대에는 그래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불평등화가 1980년대 들어 마침내 노골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화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명예를 보다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실업

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은 1970년 3%에서 1990년 20%까지 치솟았다. 노동시장이 유연적인 미국의 경우 ‘가난한 노동자(working poor)’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흑인 젊은이의 임금은 절반이나 줄었다. 또한 1979년에서 1987년 사이 1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중등교육까지 받은 노동자의 구매력은 20% 이상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 층은 1970년대 초 10% 수준에서 1990년대 초 20% 수준으로 늘어났다.

코엔(2000)의 말대로 세계는 부유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계층은 학력도 낮고 기술수준도 낮은 미숙련노동자층이다. 이들 계층은 유럽에서는 실업의 문제로 미국에서는 낮은 임금수준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나 이들 계층의 비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이제 역W자 가설(혹은 N자 가설) 등으로 바뀌어야 할 지도 모른다.

세상이 왜 이처럼 불평등하게 되어 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코엔은 크레머(M. Kremer)의 논의를 기초로 ‘오-링(O-ring)이론’을 통해 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한다. ‘오-링’은 둥근 고리처럼 생긴 접합부의 이름이다. 우주선 ‘챌린저’호가 폭발한 것도 이 접합부가 고온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우주선은 폭발하고 만 것이다. 이 이론이 함의하는 바는 일련의 생산과정에서 작은 부품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생산의 전과정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생산과정은 자질과 자격의 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춘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최고는 최고끼리 뭉치고, 처지는 이들은 그들끼리 모여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협상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기 회사 상품의 질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경영자들은 숙련수준은 약간 낮지만 그보다 임금이 훨씬 더 낮은 대체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자를 선택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포드주의적 대공장에서 그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던 일반 미숙련노동자들은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최고끼리 뭉치는 선별적 짝짓기에서 배제된 미숙련노동자들은 점차 낮은 수준의 일을 찾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그의 경력은 더욱 초라해져 가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이 가속화되면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를 기술진보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는 크루거(A. B. Krueger) 논의도와 관련이 있다. 그는 현재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진보가 미숙련노동자보다는 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이에 따라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상의 논의는 분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미래가 밝지 못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불평등의 심화 경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현상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구조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전후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평등주의적 사고가 힘을 잃고, 대신 현재는 보다 높은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감수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들 선진국의 장래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경제가 성장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그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분배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날 보리고개로 표현되던 극단적인 절대적 빈곤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을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경쟁이고, 이러한 경쟁에서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이 경쟁은 매번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을 부모로 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경제가 성장하여 비록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상대적인 소득격차 및 불평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 또한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전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도, 자본주의 시장기구에만 맡겨두어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나친 과잉보호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해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 액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러한 선진국에서 이야기되는 복지병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복지정책이 갖는 문제점들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이를 시장기구에 맡기는 제도가 보다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형평의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on)은 선진국에서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는 복지정책의 후퇴가 경제적 약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키게 될 것이

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부유한 사람들은 국가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시장체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다. 반면 양육강식의 원리가 철저히 작용하는 시장체제에서는, 저임금과 저소득에 시달리는 빈곤층의 경우 복지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생활도 빠듯한 사람들이 무슨 여유로 노후를 준비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위해 대비할 수 있는가? 또 무슨 여유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자식을 대학원에 진학시키며 유학을 보낼 수 있겠는가? 특히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에 빠졌거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의 경우, 이들을 시장체제에 방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복지정책(소득재분배정책)이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일수록 저축을 보다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여 이들 자신 혹은 자녀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이

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은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을 축소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써로우(L.Thurow)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기(motivation), 협동심,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들 요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사회적 응집력이 상실되거나 전체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이는 경제 성장 그 자체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복지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금 현재 선진국의 복지정책에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복지정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일 것이다. 에스핑-앤더슨이 주장하듯 전형적인 유럽 대륙의 복지정책의 스타일(노후를 대비한 연금에 초점이 있음) 보다는, 노르웨이나 덴마크처럼 일하는 젊은 층의 숙련의 문제, 실업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복지정

책의 초점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국제사회에서 창피할 정도로 복지정책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 상황

(1) 우리 나라는 분배 모범국인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분배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가끔씩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범죄자들의 증오 섞인 언급에는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고, 이러한 인식 자

체에 대해서 만큼은 사람들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는 분위기이다.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호화생활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극히 민감하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우리 나라가 성장의 측면에서는 물론 분배의 측면에서도 성공한 모범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이들 연구들은 사용하는 자료나 대상 시기 등의 차이로 인해 결과 자체가 약간씩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당시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초기의 실증적 연구

연구자	조사시기	이용자료	연구결과			
			소득점유율 (%)		십분위 분배율	지니 계수
			하위 40%	상위 20%		
H.Oshima	1966	특별조사	23.3	35.8	0.6508	0.2650
J.Adelman	1970	농가경제조사, 임금조사 Morrison 자문보고	18.0	44.0	0.4091	0.3600
M.Chae	1970	소득세자료	17.5	45.2	0.3872	0.3836
T.Mizoguchi et al.	1965 (1963~71)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19.3	42.8	0.4506	0.3428

자료 : 주학중(1979)

우선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평등도 지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하위 40% 소득점유율이란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세웠을 경우 앞쪽에 줄을 선 소득이 낮은 사람들(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 총합이 전 국민의 소득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란 맨 뒤쪽에 서 있는 소득이 높은 20%의 사람들의 총소득이 전 국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자의 수치를 후자의 수치로 나눈 것이 십분위 분배율이다. 즉 이 값이 0.6508 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40%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총합이 상위 20%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 총합의 65.08%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분배 지수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이다.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임의의 두 사람을 선택하여 이들의 소득의 차이를 계산한 뒤, 이 절대값의 평균을 구한다. 즉, 그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격차를 구하는 것이다. 이를 전 국민의 평균소득의 두 배로 나누어준다. 따라서 그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소득격차가 크면 클수록 분자에 해당되는 평균적인 소득격차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극단적으로 한 사람만 그 사회의 모든 소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의 소득은 0 이라면 지니계수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증명은 복잡하므로 생략한다) 반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완전한 평등 사회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사람들의 소득 차가 0 일 것이고, 이에 따라 분자가 0 의 값을 가질 것이므로, 지니계수도 0 이 된다.

<표1>에서 어떠한 지수를 보더라도 당시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는 매우 평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시마(H. Oshima)가 추계한 0.2650 은 물론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0.35 - 0.38 대의 지니계수 값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대략 0.4 를 전후로 하는 값을 보이는 10분위 분배율 또한 우리 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들은 후진국이나 중진국들에 비해서는 평등도가 월등히 높은 것이며, 선진국들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아델만(I. Adelman)은 “분배면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가 너무나 훌륭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가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까지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국내에서 소득 불평등도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였던 학자가 주학중 박사이다. 다음 <표 2>에서 주학중(1992)에서 계측한 지니계수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자. 1960년대 이후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지니계수의 값은 외국의 연구 결과처럼 0.35대의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변화 추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지니계수의 값이 점차 증가하다가, 1976년 0.391을 기점으로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이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이 우리 나라에 매우 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기간동안 국가가 분배 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성장의 효과가 국민 전체에게 고루 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분배의 문제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소득 분배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부유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하다. 따라서 이들 부유층에 대해 소득 자료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이 부정부패와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유층의 음성적인 소득의 규모나 정도가 얼마나 클 것인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통계법 상 개인의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출처가 불투명한 소득을 제대로 밝히려 할 것인가? 따라서 부유층에 대한 소득의 과소 추정 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면에서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추계 비교

연구자 연도	전국 : 지니계수		도시부문 : 지니계수		
	주학중 (1992)	안국신· 강선대 (1990)	주학중 (1992)	안국신· 강선대 (1990)	이정우· 황성현 (1998)
1965	0.344				
1970	0.332	0.314			
1976	0.391	0.391	0.412	0.461	
1980				0.416	
1982	0.357	0.385	0.371	0.442	0.393
1985				0.443	0.384
1986	0.337	0.393	0.342	0.443	
1988				0.447	0.365
1990	0.323		0.324		
1991					0.365
1994					0.363

자료 : 이정우·황성현(1998)

더욱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서는 이들 부유층이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비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소득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들 가구에 대해 소득을 조사해 봐야 정확한 응답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집 앞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세금의 회피(혹은 절약)를 위해 사업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거부감만을 야기하여 조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비근로자 층의 다른 극단에는 실업자 가구가 존재한다. 이들 실업자 가구에 대해서도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조사방법의 일관성에 의해 소득이 조사되고 있지 않다. 결국 우리 나라의 소득 통계에는 가장 부유한 일부 자영업자 가구와 가장 빈곤한 실업자 가구가 누락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는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나마 몇몇의 의욕적인 연구 역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료 구성 방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만드는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해 왔다면, 연구자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혀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소모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비근로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완·추정하느냐 하는 방법이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고(비근로자 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가의 소득, 1인 가구의 소득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연구자들마다 다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소득 불평등도를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마다 서로 상이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2>를 다시 보면 안국신·강선대(1990)의 연구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도시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주학중(1992)에 비해 지니계수의 값이 상당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 결과들은 불평등도의 추세가 주학중(1992)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1980년대 들어 결코 완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정우·황성현(1998)은 소득 불평등도를 다시 추정하였는데,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 결과 지니계수가 주학중(1992)에 비해서는 높고, 안국신·강선대(1990)에 비해서는 낮다는 중간 정도의 값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그 추세에 대해서도 1980년대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주학중(1992)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약하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 나라의 소득 불평등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기초 정보조차 정확히 알려져 있지 못한 혼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불평등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작업이다. 현진권·강석훈(1998)은 우리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연구이다. 물론 이들이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는,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는 있다. 이들은 앳킨슨(A. L. Atkinson) 등의 외국 학자들이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 상황을 비교한 연구에 기초하여, 여기서 사용한 방식대로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추정하고 있다(가구동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가구원수가 다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효과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지니계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 값이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 연구 역시 매우 혼돈스러운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표 3>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지니계수가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0.287로 나타나는 반면, 대우경제연구소의 자료에서는 0.358로 나타나 매우 현격한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통계청의 수치에 기초할 경우 우리 나라의 불평등도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우경제연구소의 수치에 기초할 경우 지니계수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지표도 우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파악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더욱이 그 연구들마저도 사용하는 자료와 분석 방식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자료의 보완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처럼 지극히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가 분배 모범국이라느니, 쿠즈네츠의 가설이 잘 들어 맞는다느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연구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3> 불균형도 지수를 통한 국제비교

국가	연도	지니계수
핀란드	87	0.207
스웨덴	84	0.220
노르웨이	86	0.234
벨기에	88	0.235
룩셈부르크	85	0.238
독일	84	0.250
네덜란드	87	0.268
캐나다	87	0.289
호주	85	0.295
프랑스	84	0.296
영국	86	0.304
이탈리아	86	0.310
스위스	82	0.323
아일랜드	87	0.330
미국	86	0.341
한국 : 대우경제연구소	92	0.358
한국 : 통계청	91	0.287

자료 : 현진권·강석훈(1998)

(2) 사람들은 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분배 면에서 지극히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 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가장 비관적인 연구 결과와 가장 긍정적인 연구 결과의 중간쯤에 진실이 있다고 볼 때 불평등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왜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고 여기는 것일까? 일부 메스컴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평등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일까?

물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 의식이 단지 허위의식이 아니라 실제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의 논거가 있다.

첫째 소득과 더불어, 혹은 그보다 더욱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富)나 자산이 매우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토지자산에 대하여 살펴보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1989)의 자료를 보면, 1988년의 경우 전체 사유지의

65.2%를 상위 5%의 계층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6.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0.838 - 0.9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진권(1995)에 따르면 1993년의 경우 상위 5%의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70.8%로 편중도가 오히려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상위 계층일수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단위가격이 높은 토지를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여, 단순히 토지보유 면적이 아니라 토지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평등도는 보다 커지게 된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이정우(1991)에 따르면 한참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1988년 한 해에만도 토지로 인한 매매차익이 20-30조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피용자보수 53조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회사의 사장에서 막노동 일군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모든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돈의 반절에 해당되는 액수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토지 보유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토지 보유의 불평등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

다면, 이 돈이 주로 누구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불평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강봉균(1989)에 따르면 상위 10%의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액은 총금융자산액의 41%에 달하며, 이에 대한 지니계수도 0.5610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권순원(1992)의 연구에서도 금융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0.770으로 나타나, 금융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소득에 비해 부나 자산이 보다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부가 더욱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서도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분석 결과가 편차를 보이고는 있으나, 다음 <표4>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이 결과는 1988년 KDI의 조사와 이에 기초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는 상이한데, 이 조사 및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정우·황성현(1998)을 참조하라). 여기서 한국의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3년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표를 보면 상위 1%, 5%, 10% 모든 수준에서 부의 집중도가 우리 나

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10% 내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우리 나라는 역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도 실시되고 있지 않고 탈루소득의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는 대우경제연구소의 조사 자료 역시 현실의 불평등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 자체의 불평등도는 크지 않을지라도, 부나 자산의 불평등도가 매우 높아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아무리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유층의 부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의 절대적 차이는 적다고 하더라도 이 차이가 주로 탈법과 비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 사람

들이 분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훨씬 커지게 된다.

<표 4> 부의 집중의 국제비교

국가	단위	조사 자료	연도	상위점유비율(%)		
				1%	5%	10%
한 국	가구	조사	1993	30	53	68
호 주	가구	조사	1966	9	25	36
프랑스	가구	조사	1975	13	30	50
캐나다	개인	조사	1970	20	43	58
스웨덴	개인	조사	1975	21	44	60
뉴질랜드	개인	상속세	1966	18	45	60
프랑스	개인	상속세	1977	19	47	65
호 주	개인	상속세	1971	20	41	57
미 국	조사	상속세	1969	25	44	53
영 국	조사	상속세	1980	23	43	58

자료 : 이정우(1998)

이 문제에 대해 이준구(1992)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분배 상의 진보가 아니라 후퇴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분배적 정의가 급속히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전략 그 자체가, 분배의 측면에서는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경제의 특정 부문, 예컨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내수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농업보다는 공업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주를 우대하는 불균형성장 방식을 택하는 것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이 전략은, 정부에 의해 선택된 일부 분야가 집중적인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함으로써 공평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삼권이 제약을 받는 등,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볼 때 개인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당해 왔다.

그러나 이는 당시 경제적 후진국이었던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 특혜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 불리는 권력형 부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말단의 공직자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는, 부유층이 획득한 부가 과연 정당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시켰다. 지금까지의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과연 경제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보다 많은 정치자금의 대가로 지불되어 온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왔다면 과연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경제의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가운 의혹의 눈길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부유층이 그 만큼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기 보다는, 대부분 부정부패와 투기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부유층 혹은 그 자녀들의 과소비나 상속의 문제 등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결국 우리 사회의 분배의 문제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소득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하는 분배의 양적 문제가 아니라, 부유층이 자신의 부를 형성하는 과정상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배의 질적 문제에 초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3) IMF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계층의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이들을 빈곤 속에 빠뜨리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경제위기시에 이들 빈곤층의 생활은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당시 서울역에 운집한 노숙자의 행렬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반면 부유층은 사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일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의 높은 이자율 덕분에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 시기동안 각 계층별로 소득이나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인용하는 연구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이 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비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가계부를 쓰게 해서, 이를 기초로 각 가구가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있으며 각 품목에 어느 정도씩 지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자료에는 비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정보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소득 불평등도를 계산하

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기에 대한 분석을 비근로자 가구까지 확대하고 있는 연구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가구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 결과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8년 경제위기 시에 150만명 이상으로까지 갑작스럽게 증가했던 실업자들은 비근로자 가구에 포함되므로, 이들이 배제된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현실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매우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표5>를 통해 1997년과 비교할 때 1998년 각 소득계층별로 소득이나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에서 제1십분위부터 제10십분위까지가 의미하는 것은 근로자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십등분하였을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부터 가장 소득이 높은 10%에 해당하는 가구까지를 나타낸다. 먼저 표에서 소득 칸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계층은 소득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평균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로 볼 때 빈곤한 가구일수록 소득의 감소가 크다는 사실 또한 잘 드러난다. 소득 감소율은 제1십분위 계층의 경우 -21.8%, 제2십분위

계층의 경우 -13.6%, 제3십분위 계층의 경우 -12.4%의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부유층으로 갈수록 소득감소율은 한자리수로 감소하여 제9십분위의 경우 -6.7%의 수치를 보이다가, 극단적으로 제10십분위의 경우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1997년 대비 1998년 계층별 소득 및 지출수준 비교
(단위 : %, 천원)

	소득	가계지출	흑자율	자산증가액	부채감소액
제1십분위	-21.8	-7.4	-20.7	-94.5	-43.9
제2십분위	-13.6	-12.2	-1.7	-38.3	-28.8
제3십분위	-12.4	-11.2	-0.7	-73.0	-23.0
제4십분위	-11.0	-10.4	-1.3	-180.4	57.5
제5십분위	-9.9	-9.1	-0.5	-152.1	35.3
제6십분위	-9.1	-8.1	-0.9	-183.9	80.5
제7십분위	-8.2	-7.4	-1.1	-277.9	161.1
제8십분위	-7.5	-7.5	0.0	-219.1	97.0
제9십분위	-6.7	-6.4	-0.3	-219.4	78.6
제10십분위	3.5	-7.9	7.5	100.3	306.7
평균	-6.7	-8.4	-1.4	-133.8	72.1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9)

가구의 지출도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였다. 가계지출은 전체적으로 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각 가구마다 비슷한 비율로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던 제10십분위 계층의 경우에도 가계지출은 7.9%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여 부유층의 경우에도 미래를 대비하여 소비를 줄인 결과로 보여진다. (부유층이 잘 소비하는 고가의 물품의 가격이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소득과 가계지출의 변화는 결국 가구의 흑자 규모에 반영된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제2십분위부터 제9십분위까지 흑자의 증감율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이들 대부분의 계층에서는 소득이 준 것만큼 지출을 줄여 그 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의 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제10십분위의 경우 소득은 3.5%만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7.9%만큼 감소함으로써, 흑자 규모는 오히려 7.5%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십분위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이다. 소득은 21.8%나 감소하였는데 가계지출은 7.4%밖에는 감소하지 않음으로써, 흑자가 20.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의 소득 대비 흑자를

나타내는 흑자율은 -33.7%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구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표의 자산증가액과 부채감소액 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제4십분위부터 제9십분위까지 이들 대부분의 계층들은 자산을 감소시키고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흑자율이 더 높아진 제10십분위 계층의 경우에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자산도 증가시키고 있다. 제1십분위부터 제3십분위까지 빈곤한 계층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제1십분위의 경우 부채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보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했던 1998년과 같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부채를 늘려가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빈곤 계층의 생활 상의 곤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1997년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 소득 불평등도를 추계하고 있는 유경준(2000)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확인

시켜 준다. <표 6>을 보면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1997년 4.5에서 1998년 5.4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의 값도 이 기간 동안 0.2880에서 0.322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비근로자가구는 제외하고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평등도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표 6> 1997-1999년 사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추이
(단위 : 천원)

	1997	1998	1998				1999	
			1/4	2/4	3/4	4/4	1/4	2/4
가구평균소득	2,287	2,133	2,232	2,094	2,072	2,133	2,221	2,102
하위 20% 평균소득(a)	947	784	800	769	756	811	784	791
상위 20% 평균소득(b)	4,255	4,244	4,244	4,226	4,132	4,203	4,591	4,147
b/a (배)	4.5	5.4	5.4	5.5	5.5	5.2	5.9	5.2
지니계수	0.2880	0.3223	0.3222	0.3283	0.3238	0.3154	0.3406	0.3153

자료 : 유경준(2000)

그런데 표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경기가 다시 급속도로 회복 단계에 들어선 1999년에도 지니계수가 0.3406, 0.3153 으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또 하나의 주제인 빈곤인구의 비율 역시 1997년 4.2%에서 1998년 9.1%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1999년 9.6%, 9.0%, 7.4% 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빈곤이 왜 증가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소득감소) 요인이 43.8%, 분배악화 요인이 49.8% 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는 지금의 빈곤 증가가 단지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의 빈곤 문제 및 불평등의 문제가 시간이 흘러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해준다.

IMF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임시직이나 불완전 고용층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열풍을 통해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선진국에서의 ‘오-링의 이론’이 우리 나라에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불평등이란 경제적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4) 불평등의 세대간 재생산 - 교육의 역할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세대간 불평등은 당연히 세습되어 진다. 부유한 계층은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와 결혼을 시키며, 자신이 사망할 때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이를 통해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유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문제는 그 정도이다. 개인의 상속에 대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사회가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불평등의 세습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불평등의 세습 문제에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나라에서건 소득의 차이 혹은 경제적 지위 상의 차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수준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사회의 평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매우 강하다.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데, 그 사람의 교육수준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람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

학시키기 위해 누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사교육 시장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는 극성스러운 부모들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계층간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모가 가난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사례가 주위에 많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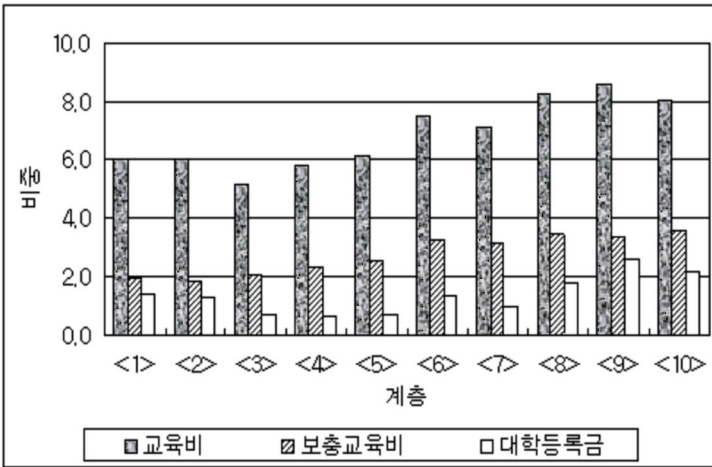
그러나 사회가 일정 궤도에 올라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계층간 유동성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만 하더라도 이것이 계층간 이동을 촉진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집중적인 사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세대간 세습되는 경향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근로자 가구의 교육 관련비의 지출 내역을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분석 역시 비근로자 가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 정도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우선 다음 <그림1>은 각 소득계층별로 전체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여기서 가로축의 <1>부터 <10>까지는 소득계층으로 볼 때 제1십분위부터 제10십분위까지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1>에서 <5>계층까지는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5-6% 수준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6>부터 <10>계층까지는 이 비율이 7-8%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부유한 가구일수록 교육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액수는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인 비율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비를 나타내는 보충교육비나 대학의 등록금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부유한 가구일수록 이러한 교육 관련비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림 1> 교육비의 계층별 비교



자료 : 정건화·남기곤(2000)

<표 7>의 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다시 확인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취학전 자녀 중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비율은 <1>계층이 29.1%인데 비해 <10>계층은 49.9%로 거의 두 배 가량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원)생의 비율 역시 부유층 가구일수록 그 비율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이 표는 보여준다. 또한 대학 등록금의 종류별 비중을 구해보면 빈곤한 가구의 경우에는 전문대 등록금의 비율이 높은 반면, 부유

한 가구의 경우에는 사립대와 대학원 등록금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자료는 생략한다)

이러한 여러 정황 증거들은 우리 나라에서 교육이 세대 간 불평등의 재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유한 가정일수록 교육 환경이 좋을 것임은 자명하며, 거기에 더하여 이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유층 자녀의 교육 수준이 보다 높을 것임을 예상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처럼 교육이 직업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철저히 사적인 시장기구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생활에 여유 있는 부유층은 미래 수익률이 높은 자녀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현재의 생활이 빠듯한 빈곤층의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을 통한 세대간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계층별 교육 상황에 대한 비교

(단위 : %)

	유치원생 수의 비율	대학(원)생 수의 비율
제1십분위	29.1	28.4
제2십분위	28.8	25.2
제3십분위	29.0	23.4
제4십분위	30.0	20.3
제5십분위	37.1	20.7
제6십분위	40.8	25.9
제7십분위	40.1	24.3
제8십분위	42.2	33.1
제9십분위	42.3	32.4
제10십분위	49.9	37.0
평균	36.9	27.1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9)

4.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가 과연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우리 나라의 불평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더욱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선진국의 경우에도 빈곤 문제는 그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적자생존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체계에서 낙오 대열이 생기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고 따라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축출해야 한다는 ‘냉혹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사회의 통합과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부유한 사람의 소득, 그 중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얻어진 소득을 조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줄이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상속 및 증여세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주로 비근로자층의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찾아내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층간 조세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빈곤층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는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을 받는 가구에 대해 그 부족분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빈곤층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

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불평등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 얼마 만큼의 유동성이 존재하는지도 중요하다. 계층간 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이다. 부모가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능력만 있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공교육 제도를 활성화시켜, 사교육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공교육 내로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빈곤층 자체에 대해서도 이 계층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이를 현실의 직업 세계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불평등이란 이를 축소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이웃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점, 평등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자기의 문제로 고민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

<참고문헌>

- 강봉균(1989),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 한국개발연구원.
- 권순원 외(1992),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류정순(1999), “빈곤의 규모 추정과 빈곤가구의 생활 실태”, UNDP 보고서.
- 안국신(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제1권.
- 유경준(2000),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우(1991),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 이정우·황성현(1998),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 이준구(1992),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9),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정건화·남기곤(2000),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1호.

주학중(1979), 「계층별 소득분포의 추계와 변동요인」, 『한국개발연구』, 제1권 제1호.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1989),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보고서』

현진권·강석훈(1998),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현진권(1995), 「토지소유의 편중실태와 종합토지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학회 발표논문.

Adelman, I.(1974), "South Korea," in Hollis Chenery et al.(eds.),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Cohen, Daniel(2000), 주명철 역,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 시유시.

Kuznets, Simon(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Thurow, L.(1985), *The Zero-Sum Solution*,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남 기 곤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대전산업대 경제학 교수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

펴 낸 곳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펴 낸 이 위원장 이 남 순
초판발행일 2000년 8월 8일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전 화 (02)761-4526
팩 스 (02)780-6448
Homepage www.FKTU.or.kr/research
